

미중 경제전쟁의 전개와 전망

왕윤종*

[국문요약]

미중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군사·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진영간 대결이라는 신냉전(Cold War)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러한 미중 관계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반면에 경제·통상 분야의 미중 충돌은 무역과 관련한 관세전쟁, 지적재산권·기술탈취 등과 관련한 기술전쟁,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환율전쟁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세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향후 경제·통상 분야의 미중 충돌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경제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미중 경제전쟁, 무역전쟁, 관세전쟁, 환율전쟁

I. 서론

미중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군사·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진영간 대결이라는 신냉전(Cold War)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러한 미중 관계를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¹⁾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으로 널리 알려진 하버드 대학 그레햄 엘리슨(Graham Allison)은 중국의 부상을 패권국 미국이 형성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이다.²⁾ 그의 논점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방관·좌시할 수 없으며,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 1) 김홍규(2019)는 2018년 전략적 차원의 경쟁 상황으로 변화한 미중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다. 김홍규,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적인 도래」, p. 173-221, 2018년 중국정보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9.
- 2)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럼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힐러리 국무장관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을 통해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한 것일 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강도의 중국 견제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펜스 부통령의 행보가 2018년 10월 4일 스탠포드 대학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행한 연설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쟁기를 칼로 바꾸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중 냉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홍규(2019)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최근 유행하는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켰다.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한 하드 파워(Hard Power), 문화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대신에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맹비난 하였다.³⁾ 김홍규(2019)는 훗날에 사가(史家)들이 펜스 부통령의 이 연설을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연설로 기록할지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의 충돌은 주로 무역과 관련한 관세전쟁, 지적재산권·기술탈취 등과 관련한 기술전쟁,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환율전쟁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관세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III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는 향후 경제·통상 분야의 미중 충돌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미중 경제전쟁의 전개 과정

1. 관세전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은 2017년 4월 트럼프 자신이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작심을 하고 기선 제압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미국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고 미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

3)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허드슨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

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며 양국 간의 통상관계는 여전히 호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시장의 개방을 확대하여 미국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⁴⁾

양국 정상은 일단 탐색전을 펼쳤고 이른바 ‘100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00일 계획’이 끝나고 7월 19-20일에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에서 미국 측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미국은 8월 14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고,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세전쟁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⁵⁾

2017년 11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중국이 총 2,535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약속하면서 중국의 구매력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지키지 못할 약속에 불과했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화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보이기 시작했다. 2,535억 달러는 허황된 숫자였을 뿐이다. 2017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미 상무부 통계 기준 1,3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한 해 수출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이 과연 얼마 동안 사줄 것인지도 불투명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 미중 관세전쟁은 부침이 있었지만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은 미중 양국의 관세전쟁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미중 양국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니딜로 불리는

<표 1> 미중 관세전쟁 일지

일 시	미국 → 중국	중국 → 미국
2018. 07. 06	340억 달러 25%	340억 달러 25%
2018. 08. 23	160억 달러 25%	160억 달러 25%
2018. 09. 24	2,000억 달러 10%	600억 달러 5-10%
2019. 05. 10	2,000억 달러 25%	-
2019. 06. 01	-	600억 달러 5-10%
2019. 09. 01	1,030억 달러 15%	750억 달러 일부 5-10%
2019. 10. 01	2,500억 달러 30%(보류)	
2019. 12. 15	1,650억 달러 15%(보류)	750억 달러 일부 5-10%(보류)

자료: 저자 정리

4) 정재호, 「2017년 미중 관계의 평가」, p. 184-185, 2017년 중국경제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8.

5) 미중 관세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왕윤중(2019), 최병일(2019)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단계 협상이 타결될 예정으로 10월에 이어 12월로 예정되었던 관세부과는 보류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전쟁을 벌이고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국제무역질서는 크게 훼손되었다. 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왜 관세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초당적 외교관계 썹크 탱크인 미 외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포용하지 말고 적절히 견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미 의회는 트럼프 탄핵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거의 만장일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견제는 단순히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데 있지 않다.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전쟁을 벌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모를 리 없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미중 관세전쟁의 전면에 나서는 인물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집권 초기부터 아직까지 그를 곁에 두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반중 인사이다. 2011년에 그가 집필한 「중국이 가져온 죽음(Death by China)」은 중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가져오는 인권탄압, 노동탄압, 환경 파괴, 위생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지구 전체가 죽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그는 미국이 관세전쟁을 선포한 즈음인 2018년 4월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쓴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은 결코 상호 호혜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⁸⁾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탈취, 강제기술이전 요구 등으로 미국의 소중한 기술과 지식이 중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대 중국 301조 보복관세에 대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특히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이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는 나쁜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요구는 단지 무역수지 적자 폭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기술이전 금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보조금의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확실한 약속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⁹⁾ 또한 환율조작, 중국 금융 및 서비스시장의 폐쇄성 등 반시장적 조치에

6) Robert D. Blackwell and Ashley J. Tellis(2015),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Special Report No. 72,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7) Peter Navarro and Greg Autry(2011),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 1st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8) Peter Navarro(2018), "China's Faux Comparative Advantage," Wall Street Journal April 5, 2018.

대한 개선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무역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무려 142개의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 이후 중국이 협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였다. 우선 중국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법 개정보다는 국무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 민감한 사항은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협정문에 시행조항(enforcement provisions)의 검증을 미국이 직접 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증을 담당할 기구로 시행 사무국(enforcement office)의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강제적 의미가 강한 시행(enforcement) 보다는 유효적인 의미의 이행(implementation)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정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¹⁰⁾

법적 이행과 관련하여 스냅 백 조항(snapback provisions)의 삽입 역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사항이다. 미국은 중국이 협정의 이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즉시 재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만이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협상 타결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관세를 원상대로 낮추게 되지만 언제라도 중국이 협정 이행을 제대로 안한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미국만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호혜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을 둘러싼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결국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 타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¹¹⁾

미중 무역협상은 여러 차례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9)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산업정책의 청사진이다. 1단계에서는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수준(2그룹)까지 근접시키고, 2단계에서는 2035년까지 독일, 일본 수준을 제치고 2그룹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며, 3단계인 2045년까지 미국 수준(1그룹)으로 진입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획기적인 R&D 투자와 10대 핵심 업종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핵심 업종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궤도 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장비 등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서 <중국제조 2025>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는 이현태 외(2017)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왕윤중(2019), p. 20.

11) 왕윤중(2019), p. 20.

못하고 있다.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90일간 휴전 기간을 갖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협점을 못 찾았다. 이후 관세 폭탄은 더 큰 규모로 양국 수입품에 떨어졌고, 중국 유학생의 미국 입학이 제한되고,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마주친 양국 정상은 협상에 돌입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9월 1일 미국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합의가 어려운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청구서의 내용이 워낙 포괄적이고, 중국이 수용하기에는 버거운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돌파구가 찾아졌다. 10월 10-1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그동안 고집해왔던 포괄적 협상 대신에 단계적 합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 딜(phase one trade deal)에 대한 합의가 곧 성사될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15일 중국산 상품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3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렸다.¹²⁾ 1단계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갖고 노력한다는 “선이난후(先易亂後)”의 자세로 미중 양측이 조금씩 양보와 상호 배려의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단계 합의도 쉽지 않았다.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1단계 딜에서 미국이 관세인하 대신에 관세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관세인하를 얻어내려면 농산물 구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산업보조금 등 여러 쟁점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는 2단계 딜에서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미 하원의 탄핵 발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를 배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상처를 줄 것이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낸 애국 농민은 여전히 중요한 지지 기반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매해준다면 트럼프에게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¹³⁾ 그런데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가 정말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관세전쟁이 시작되기 전 해인 2017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농산물 총액은 195억 달러였다. 2018년에는 92억 달러로 감소했다. 미국으로서는 300억 달러 수준으로

12) 1단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농산물 구매 금액도 400-5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다.

13) 미 행정부는 시장원활화 정책(Market Facilitation Program)에 따라 중국의 보복관세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해 현금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28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농가 지원금을 약속했으나 이는 지난 5월에 미 농무부가 마련한 자금의 후속 집행일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 구매에 나선다면 애국농민들의 표심이 돌아올 수 있다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구매액이 결정되더라도 1단계 딜로는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관세동결 정도로 중국이 농산물 구매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적어도 미국이 2019년 9월 1일 부과한 관세는 철회해 주어야 중국이 1단계 딜에 합의해 줄 것이다. 즉 부분 관세철폐(partial rollback) 정도의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전쟁

불과 몇 년 전 ‘대륙의 실수’로 우습게 봤던 샤오미(小米)는 이제 ‘대륙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설립 9년 만에 샤오미는 468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합류했다.¹⁴⁾ 샤오미 이외에도 준비된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들은 줄을 서고 있다.¹⁵⁾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강국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다. 더 이상 모조품(짝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굴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업굴기, 기술굴기를 그냥 좌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세전쟁을 개시하면서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제조 2025>을 불공정한 산업정책의 예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기술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는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저지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¹⁶⁾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부족한 선진기술을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 인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중국기업의 총 인수 금액은 무려 46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원자재나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거의 ‘묻지 마’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중국은 눈독을 들였다. 미국도 경계심을

14) <https://fortune.com/global500/2019/>

15) 중국 기업전문 조사기관 후룬 연구소(Hurun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186개로 미국의 136개를 추월했다. 2018년에만 새롭게 탄생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의 수는 97개로 3.8일에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http://www.chinadaily.com.cn/a/201901/28/WS5c4ead1da3106c65c34e6dfc.html>

16)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1950년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제721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1975년 범정부 위원회로 설립되어 1988년 「엑슨-플로리오 수정법(Exon-Florio Amendment)」, 2007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의 제정을 통해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CFIUS의 연례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 CFIUS의 심의를 거친 국가별 M&A 사례는 총 612건이고 이 중 중국이 107건으로 가장 많다.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에 대해 심의를 강화했다. 매년 심의 건수가 증가했고,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기 힘들게 되자 중국기업들은 진행 중이던 인수·합병(M&A)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2월 칭화유니그룹의 샌디스크 우회 인수 건이다.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중국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의 인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동 위원회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결국 칭화유니그룹은 인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¹⁷⁾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9)」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한 법안을 포함시켰다.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이 바로 그것이다. 동 법안은 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매 2년마다 <중국의 대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국의 호혜성(reciprocity)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즉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는 한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 M&A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RRMA 제정과 함께 개정된 <Export Control Reform Act(ECRA)>는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의 민감한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개정에서 근원적 기술과 신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제품의 구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 유지해 왔던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체제를 대신해서 유지되고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조치의 내용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¹⁸⁾ 개정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기업에 대해 핵심기술의 중국 이전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미국기업들은 중국기업에 핵심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17)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는 낸드 플래시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샌디스크의 인수를 위해 칭화유니그룹 산하의 자회사 유니스플랜더를 통해 샌디스크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전략을 폈다. 그러나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웨스턴디지털의 지분인수가 저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칭화유니그룹은 동 계획을 포기하였다. 웨스턴디지털은 2016년 5월 샌디스크의 인수를 완료하였다.

18) 1991년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이 1994년 폐지되기에 이르자, 일부 국가의 대량 살상무기 보유 움직임과 재래식 무기 과잉 축적 움직임에 따른 지역 안보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COCOM을 대체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된다는 것이다.

미중 간 기술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야는 5G 통신기술 분야이다.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국은 또 다른 통신제조업체인 ZTE(중흥통신)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제재조치는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상무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의 수출통제법 및 대 이란 제재법을 ZTE가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미 상무부는 미국산 부품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7년 3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ZTE에 대해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관련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대 이란 제재 위반으로 2019년 4월 이탈리아 최대은행으로 알려진 ‘유니크레디트’에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전 최고의 금액이 바로 ZTE에 부과된 것이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ZTE는 2018년 4월 미 재무부의 시정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모든 미국기업과 7년 간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받았다. 결국 ZTE로서는 6월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벌금은 2억 달러 감액되어 1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제재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 재무부는 4억 달러의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또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미국인으로 구성된 준법 감시팀이 ZTE에 고용되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ZTE 사태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치욕이고 손실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조치를 회피해서 이란, 북한 등과 거래할 경우 미 재무부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ZTE 사태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ZTE가 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구호에 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침내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전쟁에서 화웨이를 정조준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화웨이가 4차 산업혁명, 5G 시대에 중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비롯해 ICT 분야의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미 법무부는 ZTE와 마찬가지로 화웨이에 대해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재 기소 중이다. ZTE는 미국 정부에 엄청난 벌금을 물고 각종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화웨이의 운명도 과연 같을 것인가? 화웨이가 설령 미국 시장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핵심 부품과 기술 없이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화웨이는 2012년 스웨덴의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회사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통신장비 회사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5G 기술에 기반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4차 산업혁명의 ABC는 5G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비로소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 화웨이는 바로 중국과 세계의 5G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화웨이는 4G 시대의 최고 강자였던 퀄컴의 아성에 도전하며 SA(Standalone, 단독규격) 및 NSA(Non-Standalone, 복합규격)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 가능한 ‘발롱(Balong) 5000’ 칩셋을 개발했다. 또한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자체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AP인 기린 시리즈를 개발했다. 5G 분야의 특허나 기술력에서 화웨이의 지위는 탁월하다. 화웨이는 2018년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특허출원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2019년 1/4분기 기준 5G 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출원 건수에서도 노키아,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¹⁹⁾ 이러한 화웨이의 거칠 것 없는 독주에 제동을 건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아마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을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6일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외국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26개국 72개 계열사를 거래제한기업 명단(entry list)에 올려 놓았다. 이 명단에 올라간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기업들은 반드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완전한 거래 금지는 아니지만 화웨이와의 거래를 건 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2018년 말 화웨이의 CFO이자 회장의 딸인 멩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한 이래 화웨이에 대해 최대의 강수를 둔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화웨이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던 브로드컴의 공급 중단은 아프긴 하지만 화웨이는 자체 AP 및 모뎀칩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러나 사실 화웨이의 대표 AP인 기린 시리즈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CPU는 영국의 ARM이 설계하고 있다. 손정의의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소유한 ARM도 미국의 제재 조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구글도 동참하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 화웨이가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최대의 부품 조달처로 일본을 선택하고 있다. 11월 21일 일본을 방문

19) 2018년 중국은 5G 기술표준 분야에서 특허출원(SEP 출원 건수)에서 전 세계 34%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화웨이는 ‘5G NR(New Radio)’ 기술 분야에서 1,48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핵심 기술로 꼽히는 ‘폴라코드(Polar Code)’ 분야에서 전체 특허의 절반(49.5%)을 차지하고 있다. 조은교, 「미중 5G 경쟁과 한국의 대응」,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7권 제3호, 2019, 성균중국연구소.

한 량화(梁華)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화웨이의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구매액이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 구매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2018년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에 달한다.²⁰⁾ 화웨이는 미국 대신에 일본을 선택하였고, 2018년 아베 총리의 북경 방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3. 환율전쟁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중국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대통령이 되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막상 45대 대통령이 된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미국 국내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 2015년부터 미 재무부는 새롭게 제정된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매년 두 차례(4월과 10월) 일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경우 중국은 단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일 뿐 다른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이라고 볼 수 없다.²¹⁾ 비록 중국의 환율제도가 중국 인민은행의 관리변동환율제도 하에 운용되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가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되었거나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달러 당 6.82-6.83 위안으로 위안화를 달러화에 고정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고정환율제도는 곧 포기되었다. 2010년 6월 관리변동제도로 다시 복귀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2012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pm 0.5\%$ 에서 $\pm 1.0\%$ 로 확대하였다. 위안화는 달러 당 6.23 위안으로 2005년 대비 25%, 2010년 대비 8.3% 절상되었다. 2014년에는 다시 한 번 위안화의 일일 변동 폭을 $\pm 2.0\%$ 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위안화 기준환율의 산정방식의 변경을 고시하면서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시장의 수급 여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전일 증가와의 괴리가 컸던 위안화 환율은 항상 인민은행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해 시장왜곡 현상이

20)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전 화웨이 공급망 총 책임자를 역임한 인물이다. 오랜 기간 소니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화웨이는 후지필름, 후루카와전기,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 R&D 분야 협력을 강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화웨이는 일본 내 1,0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300명의 인력이 화웨이 보유 3개 R&D 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Nikkei Asian Review, "Huawei turns to Japan as US blacklisting hits supply chain," November 21, 2019.

21)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GDP 비율이 3% 이상, ③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시장조성자의 호가를 증시하겠다는 것으로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의 결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은 전일 증가 대비 1.79% 절하되었고, 이후 3일 연속 절하되었다.²²⁾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11월 30일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바스켓 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0년에도 편입을 강하게 희망했으나, 위안화의 대환성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5년이 지나서 다시 시도한 결과 위안화는 SDR 바스켓 통화로 편입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자본 및 외환 통제로 여타 SDR 바스켓 통화에 비해 위안화의 위상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해 위안화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0년부터 위안화 환율제도의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15년 말 이후 위안화 환율은 계속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말 위안화 환율은 달러 당 7위안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015년부터 자본유출 압력으로 위안화 환율은 약세를 보였고, 인민은행은 환율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다. 한 때 4조 달러를 상회하였던 외환보유고가 2017년 1월에는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인 3조 달러를 하회하였다.²³⁾ 이후 위안화 환율은 다시 강세로 반전하였고,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 4월 위안화 환율은 달러 당 6.2위안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중 관세전쟁이 선언되면서 위안화는 약세로 반전되었다. 2018년 11월 말에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 당 7위안에 근접하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고,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위안화는 소폭 절상되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전반적으로 위안화는 10% 가깝게 절하되었다. 인민은행은 역외 시장(홍콩)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절하 기대감이 커지자 2018년 11월 이후 5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약 170억 달러에 달하는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여 위안화 수요를 부추기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2019년 8월 5일 급기야 위안화 환율이 달러 당 7위안을 돌파하였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7위안의 벽이 깨진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외화 순유출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외환시장의 수급 악화로 위안화는 더 이상 7위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2019년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미국이 이를 실행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결국 중국 외환당국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포치(破七)를 결행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드디어 버리고 있던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냈다. 위안화가 7위안의 벽을

22) 왕윤중(2016), 「달러패권」, p. 244-245.

23) 왕윤중·이치훈(2017), p. 46.

개는 순간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았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근거는 앞서 지적한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악명 높은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종합무역법>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②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무역촉진법>의 기준에 비해 엄격하지 않으며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대규모 외환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유도해 왔으며,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중 관세전쟁으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은 미 재무부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하였다. 오히려 위안화의 가치절하는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하는 시장의 결과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위안화 환율은 11월말까지 계속 7위안을 상회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을까?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전쟁은 양국간 경제적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원하는 바는 단순히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중국은 더욱 강한 자본통제를 통해 외국의 투기자금이 중국 금융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1985년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플라자 합의가 중국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제로이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환율절상 요구를 받아 들였다.²⁴⁾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일본만큼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유은행의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폐쇄적인 자국의 금융시장에서 성장해 온 중국 금융기관들은 자본자유화의 파고를 결코 쉽게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서봉교(2019)는 중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

24) 1984년 말 달러의 강세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했다. 미국의 산업계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입 경쟁산업의 보호를 위해 달러 강세를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 의회와 노조도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달러의 평가절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었던 미 재무부는 미 달러화의 약세를 방지하려면 고육지책으로 긴축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했다. 결국 1985년 9월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협조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간의 협조적 개입을 통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1985-88년 기간 동안 달러는 엔화 대비 50%, 독일 마르크화 대비 20% 절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왕윤중(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안화를 절하하는 환율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신에 위안화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90년대 초 30% 수준에서 2018년 18%로 감소함에 따라 수출 대신 내수를 부양시키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달러 당 6위안 초반까지 위안화의 절상을 용인하더라도 자본자유화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채택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서봉교(2019)의 전망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위안화 환율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달러 당 7위안을 초과하는 현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달러 당 8위안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미중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급증이 위안화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경제학 분석

미중 패권전쟁을 군사·안보·외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거대담론 수준의 논의에서부터 각 세부적 항목에서 미중 갈등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중 패권전쟁을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도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세 및 무역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의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경제학 분석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관세 및 무역전쟁의 관점에서 시도되는 경제학 분석은 크게 최적관세이론에서 출발한다. 자유무역이론과 달리 관세부과가 자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해리 존슨(Harry Johnson)의 1954년 논문에 근거한다.²⁵⁾ 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 나라의 후생(welfare)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상대가격인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함수이다. 큰 나라는 관세부과를 통해 교역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관세율을 최적화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이론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큰 나라는 관세부과를 통해 교역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수출가격을 상승시키고 상대국의 수입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면 자국의 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대국이 마찬가지로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관세부과가 교역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두 나라 모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해리 존슨의 분석은 관세 부과에 따른 비협조적 내쉬 균형이 사회적 최적보다 개선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했다. 이후 바그웰-스테이거

25) Harry G. Johnson, "Optimum Tariffs and Retali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 pp. 142-153, 1954.

(Bagwell and Staiger, 1999)의 1999년 논문은 GATT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체제가 보호무역체제보다 우월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즉 미국과 같은 큰 나라가 교역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관세부과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GATT 체제가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부과에 따른 교역조건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된 분석이다. 수출품과 수입품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실제로 교역조건이 다양한 품목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는 대단히 번거롭고 수고가 많이 가는 일이다. 랠프 오싸(Ralph Ossa)의 2011년 연구는 2014년 데이터에 근거한 무역전쟁에 관한 분석으로 발전하면서 실증적으로 비협조적 내쉬균형(관세전쟁)과 협조적 균형(무역협상)을 비교하는 연구로 주목받았다.²⁶⁾ Ossa(2014)의 분석에 따르면 최적관세율은 상대국의 보복이 없다는 가정 하에 62.4%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의류산업과 같이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경우에만 보복관세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소비자가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여 업계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에 부과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수입품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피해를 주려면 낮은 관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체재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결국 관세부과로 인한 수입품 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의 피해로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수입에 대해 관세부과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이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선을 노리는 입장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네로피 골드버그가 참여한 “보호주의로의 회귀(The Return to Protectionism)”라는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명의 저자가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논문으로 2017년 1월 이후 2018년 11월까지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중국 등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인상을 함께 고려하여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교역조건 개선효과, 관세수입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교역조건 개선효과는 216억 달러로 GDP 대비 0.12%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는 상대국의 보복

26) Ossa(2014)의 연구는 Grossman and Helpman(1994, 1995)의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 이익집단의 로비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세 인상이 없을 경우에 비해 대체로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수입합수와 수출합수의 수요 및 공급탄력성을 추정하여 수입과 수출의 변화를 계산해 본 결과 미국의 해당 관세품목의 수입은 31.5% 감소하고, 상대국으로의 수출은 11.0% 감소하였다. 관세부과에 따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연간 감소액은 GDP의 0.37%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교역조건 개선효과와 관세수입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후생의 감소는 GDP의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관세전쟁이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두둔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교역재인 농산물 수출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무역을 전공하는 국내 학자들에게 본 논문에 대해 일독을 권하고 싶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중국시장을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중국과 교역하는 많은 국가들은 어부지리(漁父之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벌여 상품관세를 인하하고 서비스분야의 각종 제한적 조치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개방효과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교역을 하는 많은 국가들도 최혜국대우에 따라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중국시장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규칙에 근거한(rule-based) 방식이 아니라, 힘에 근거한(power-based) 방식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마투와 스타이거(Mattoo and Staiger)는 무역전쟁이 치러할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중국이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에 근접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방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폐쇄적인 개방 수준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역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기존의 무역자유화 방식으로 중국을 개방시킬 수 있다면 미국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에 의거한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적으로 중국을 개방에 이르게 한다면 이는 세계 전체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일방적 조치를 취하듯이 향후 중국과 같은 큰 나라가 똑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역국에게 일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국가들이 힘에 의존해서 개방을 추구한다면 국제무역질서는 대단히 무질서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령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규칙에 근거한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이 내린 결론이다.

27)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는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전쟁은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2019년 초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및 관세전쟁이 넓게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변화와 같은 국제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좁게는 한중일 3국 등 동북아시아의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가 입수되어야 하는데 아직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는 2016년 통계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론에 어려움이 따른다. 미중 무역전쟁이 향후 일정 시점에 타협점을 찾고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 세계무역의 둔화 현상을 두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오바시와 키무라(Obashi and Kimura, 2018)는 오히려 동아시아 역내 무역구조에 있어 중국을 허브로 한 역내 가치사슬 구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역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조철(2019)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의 측면에서 미중 분쟁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무역전쟁의 측면에서 미중 분쟁은 세계무역을 위축시켜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산기지의 이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술전쟁의 측면에서 중국이 해외로부터 자유롭게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중국의 기술추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기술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얼마나 기술자립이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조철의 연구는 엄밀한 실증분석에 기반한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의 가치사슬 구조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치사슬 구조 형성에 핵심적인 국가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 대만, 한국 등의 대 중국 투자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 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중국산으로 둔갑한 제조품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본, 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 기업의 경우 정보통신제품의 93%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중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생산기지 이전과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왕윤중(2019)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무관하게 이미 가공무역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줄여 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임노동력에 근거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적 우위는 사라질 것이고, 베트남을 비롯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새로운 생산기지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은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과 긴밀한 가치사슬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동아시아 분업구조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기술전쟁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법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강제기술이전 문제,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경제학적 분석의 틀로 기술전쟁의 문제를 조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기술전쟁을 기술추격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이 기술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론 이상의 학문적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선두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현재 주어진 과업을 단순히 수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넓은 과업을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 중이다. 중국이 전자라면 미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결국 기술전쟁은 기술경쟁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경쟁과 기술전쟁과 같은 주제로 좀 더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미중 환율전쟁이라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나의 여부를 둘러싼 중국의 환율제도 및 운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NAFTA에서 이름을 바꾼 USMCA를 보면 환율조작금지가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무역협정과는 달리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저평가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껏해야 위안화의 저평가 여부를 실질실효환율의 측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실효환율의 평가를 통해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을 조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질실효환율의 변동은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위안화가 앞으로 국제결제통화로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²⁸⁾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는 환율전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8) 위안화 국제화에 관해서는 참고 Wang(2017), Kim-Kim-Wang(2018)을 참조하기 바란다.

IV. 결론

한 때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전략고문을 담당했던 반중 극우파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미 대선 과정에서 통상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후보 역시 반중의 기치를 들고 트럼프 못지않게 홍콩의 인권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인권민주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of 2019)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에 대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한 동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1단계 딜의 가능성은 금년을 넘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1단계 딜이 미니 딜로 처리된다고 보면 2단계 딜은 계속 난관이 예상된다.

2단계 딜에서 포괄적으로 처리될 쟁점에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화웨이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통신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화웨이는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화웨이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1위이다. 2위인 일본의 미쓰비시전기, 3위인 미국의 인텔 등에 비해 돈이 되는 고품질 특허가 별로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단 양(量)으로 시작해서 질(質)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 중국 방식이다.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스티브 배넌은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미중간 무역협정의 합의보다 중요하다는 험담으로 핵심을 찌르기도 했다. 그는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에서 배제함으로써 중국의 산업 생태계를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일본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이에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기업들은 발 빠르게 홍색 공급망(Red Supply-Chain) 구축을 통해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화웨이는 기술력을 갖춘 일본 기업에 구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자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대만을 포함해서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력으로 모든 핵심기술을 단 기간 내에 확보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의도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화웨이의 불법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 이후에 해도 무방하다. 미국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만으로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이다. 그 동안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고, 실제로 그 여파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소비재 시장을 뚫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한국산 화장품도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 로컬 기업의 등장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드 사태 이후론 한류(韓流)는 죽었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는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칸 영화제 황금종료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영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2018년 아베의 베이징 방문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베는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물론 국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말이다.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는 일본 개발금융의 저력을 잘 알고 있는 중국도 일본의 협력을 무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중국은 2020년 봄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으로 화답하고 있다. 2020년 동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연이어 아시아에서 열리면서 일본과 중국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중 양국간 문화 및 관광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려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한 번 방문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김홍규(2019),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적인 도래,” 『2018년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173-221.
- 서봉교(2019), “미중 갈등과 금융 분쟁,” 『성균 차이나 브리프』, 7(4), 134-140, 성균중국연구소.
- 왕운중·이치훈(2017), “중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개혁 딜레마,” 『한중사회과학연구』, 15(3)(통권 44호), 25-55.
- 왕운중(2016), 『달러패권』, 프리이코노미북스.
- 왕운중(2018),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남수중 외,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연구보고서 18-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왕운중(2019), “미중 통상분쟁이 동북아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31(1), 1-40.
- 이현태 외(2017),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7-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재호(2019), “2017년 미중 관계의 평가,” 『2017년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184-185.
- 조은교(2019), “미중 5G 경쟁과 한국의 대응,” 『성균 차이나브리프』, 7(3), 성균중국연구소.
- 조철(2019), “동아시아 분업: 새로운 서플라이체인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2020 한중 비즈니스 전략 포럼 발표자료, 한국무역협회.
- 최병일(2019),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책들의 정원.
- Amiti, Mary, Stephen J. Redding, and David Weinstein(2019),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 *CEP Discussion Paper* No. 1603,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Bagwell, Kyle, and Robert W. Staiger(1999), “An Economic Theory of GAT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1), 215-248.
- Blackwell, Robert D., and Ashley J. Tellis(2015),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Special Report* No. 72,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 Fajgelbaum Pablo D., Pinelopi K. Goldberg, Patrick J. Kennedy, and Amit K. Khandelwal (2019), “The Return to Protectionism,” *NBER Working* No. 25638.
- Graham, Allison(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 Grossman, Gene M., and Elhanan Helpman(1994),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833-850.

- Grossman, Gene M., and Elhanan Helpman(1995), "Trade Wars and Trade Talk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4), 675-708.
- Johnson, Harry G.(1954), "Optimum Tariffs and Retali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 142-153.
- Kim, Chang Sik, Sunhyun Kim, Yunjong Wang(2018), "RMB Bloc in East Asia: Too Early to Talk About It?" *Asian Economic Papers*, 17(3), 31-48.
- Mattoo, Aaditya and Robert W. Staiger(2019), "Trade Wars: What Do They Mean? Why Are They Happening Now? What Are The Costs?" *NBER Working Paper* No. 25762.
- Navarro, Peter and Greg Autry(2011),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 1st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 Navarro, Peter(2018), "China's Faux Comparative Advantage," *Wall Street Journal*, April 5, 2018.
- Obashi, Ayako and Fukunari Kimura(2018), "Are Production Networks Passe in East Asia? Not Yet," *Asian Economic Papers*, 17(3), 86-107.
- Ossa, Ralph(2011), "A New Theory of GATT/WTO Negoti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9(1), 122-152.
- Ossa, Ralph(2014), "Trade Wars and Trade Talks with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2), 4104-4146.
- Peter Navarro(2018), "China's Faux Comparative Advantage," *Wall Street Journal* April 5, 2018.
- Peter Navarro and Greg Autry(2011), *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 1st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 Robert D. Blackwell and Ashley J. Tellis(2015),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Special Report No. 72,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 Wang, Yunjong(2017),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sian Monetary Cooperation," *Seoul Journal of Economics*, 30(1), 19-49.
- <http://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
- <https://fortune.com/global500/2019/>
- <http://www.chinadaily.com.cn/a/201901/28/WS5c4ead1da3106c65c34e6dfc.html>
- Nikkei Asian Review(2019.10.21), "Huawei turns to Japan as US blacklisting hits supply chain".